

종합·해설

민주당 지도부 '광주시의회 갈등 해소 중재안' 제기

'하반기 원구성 양보안' 통할까

비주류 "2년후의 약속 어떻게 믿나"

한대표 "원 재구성은 곤란"... 타협 미지수

의정단 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광주시의회 주류와 비주류 간 의정선거 무효 소송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안으로 하반기 원구성 주도권을 비주류 쪽에 주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위 계속되는 안 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하면서 "소송 취하가 우선되면 전반기 의정단과 상임위원 등은 하반기에는 의회 지도부에 참여하지 않도록 약속해주는 중재안이 현실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류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이라며 비주류 측 분위기를 전했으나, 한 대표가 "(주류 측의) 광주시의회 독식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 상황에서 다시 원 구성을 하는 것은 어렵다"며 시급한 갈등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있고 비주류 측 일부 의원들도 중앙당에 수습책을 위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타협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당 지도부와 비주류 측 인사들 상당수도 현재 의회 지도부의 몇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비주류 측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여서 타협의 가능성을 더욱 높게 하고 있다.



"보수언론, 권력화 넘어 정권교체 투쟁"

노대통령 "임기말 소통령·비선권력·게이트 없을 것"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일부 언론사 간부와 간담회에서 "보수언론은 권력화를 넘어 아예 정권교체 투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임기말 현상과 관련, "장관들이나 공무원들은 국정 시스템의 통제권을 따르고 있다"며 "소통령이나 비선권력, 게이트도 없을 것이고 적어도 정부에 대한 장악력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인사 논란과 관련, "인사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자격안된 사람을 보내는게 아니다"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만큼 (공기업에) 감사들을 많이 내려보낸 이유가 감사가 애정과 책임을 갖고 감사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공기업을 통제할 수단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연합설은 정치공작"

이명박 전 서울시장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정치권 일각과 인터넷 언론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연합설에 대해 "정치공작"이라고 일축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내륙은하' 탐방 경유지인 충북 충주에서 "여당에서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치공작의 하나"라며 "대연합설"을 부인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무분별 갯벌매립 더 이상 안된다"

새만금 용도 일부만 우선지정 바람직

이치범 환경부장관

이치범(사진) 환경부 장관은 "개발 위주의 갯벌(공유수면) 관리 정책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조차 통제할 수 없이 개발 부서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무분별한 갯벌 매립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등을 걸고 새만금 사업을 대상으로 최대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정부의 갯벌매립 정책의 대전환 여부 및 향배가 주목된다.

한나라 '호남의 입'

이정현씨 당직 사임



한나라당 내 최장수 호남 출신 당직자인 이정현 수석 부대변인(49·사진)이 당직을 떠났다. 전남 곡성 출신으로 사래지오고와 동국대를 졸업한 이 부대변인은 민정당을 시작으로 민자당, 신한국당을 거쳐 한나라당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경상도 정당'에서 무려 23년을 보낸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



'바다이야기 의혹 밝히기' 대책회의

인오력게임 '바다이야기'의 인·허가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및 여권 인사 연루설 등에 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한나라당 김용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정책위의장단과 문공위원들을 불러 사행성 성인오력게임 '바다이야기'의 인·허가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및 여권 인사 연루설 등에 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정부, 북 핵실험 '24시간 밀착감시'

정부와 군 당국이 지난달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에 따른 유엔의 대북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의 핵 실험으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밀착감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일 "북핵 6자회담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지하 핵실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병사 6명이 최근 극비리에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 감시를 위해 휴전선을 따라 적어도 수 개의 관측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한 지난 17일 미 언론의 보도와 관련,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결의안 통과 이후 북측이 '더 강력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논리적 가능성 하에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Table with 8 columns and 3 rows of court case notices. Each cell contains case number, parties, lawyer, and court information.